

與 입법독주에 정권 퇴진 꺼낸 野 “차라리 계엄령” “히틀러 치하”

김종인 “완장 찬 ‘정권호위병’ 세력 입법권 무력화”

주호영 “이러다 전체주의 독재국가 되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은 10일 정부 여당이 개혁입법 완수라는 명분을 내걸고 진보 진영의 오랜 숙원 법안들을 정기 국회 마지막 날 속전속결로 처리하자 “차라리 계엄령 선포”, “히틀러 치하”, “정권 퇴진” 등 독설을 쏟아내며 개혁입법 처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 여론을 뭇비난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경제3법, 5·18 역사왜곡 처벌법,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등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공수처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쟁점이 첨예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다시 한번 ‘입법폭주’를 예고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호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있다”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세력이 무소불위 국정폭주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양된 목소리마저 나오는 엄중한 사태”라며 “유신 시절에도 감히 엄두 못낸 법치주의 말살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민주당을 뭇비난하면서 “이런 정국 상황은 히틀러 치하 독일과 유사하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 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간다”며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걸 믿고 있지만 집요한 집권세력들의 획책으로 이러다 대한민국이 정말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위기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재 정책위의장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의 궤멸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의중만 중요한 민주당에게 대통령 하명 완수라는 영광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의회민주주의의 수치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기로 한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성일종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 상정된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독재자 여동생의 한마디에 만들어진 법을 논의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이 김여정 마음대로 움직이는 나라인가. 김여정이 국정 개입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김여정 하명법’을 부결해야 한다. 의원들이 대한민국 자존심을 지켜달라”며 법안 부결을 요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허울만 좋은 공정, 정의의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만 받들기 위해 법, 절

차, 원칙을 무시한 채 본인 입맛에 맞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남북교류법 등 쟁점 법안 강행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거대여당의 입법독주는 반민주주의적이다. 신성한 권력을 남용하면 그 끝은 파국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만 남겨놓자, 김현아 비대위원은 “이제 야당은 악법에 반대할 권리, 폭정을 견제할 권리를 도둑질 당했다. 대한민국 정치는 수심길을 아니 수천길을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결국 야당과 국민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했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당 주의’라고 성토했고, 정원석 비대위원은 “공수처는 과거 민주화를 위해 몸을 바친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위선과 맞바꾼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퇴임 후 도저히 감당 못할 자신들의 흔적을 숨기기 위한 백신”이라고 꼬집었다.

원내 투쟁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원(院) 밖에선 재야 시민사회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체들과의 ‘반문 연대’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국민통합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원자력국민연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보수야권 시민단체가 집결한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대표로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

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범야권은 뜻을 같이 하는 걸로 안다. 국민의힘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권 퇴진 운동에 힘을 실었지만 장외투쟁으로 투쟁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원안 후퇴’ 지적에 與서 고개 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박용진 “文정부 대선 공약...개정안 재발의 논의”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원안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로 방향을 바꾼 데 비판이 잇따르자 민주당에서도 10일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석 257인 중 찬성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여당의 핵심 추진 법안이었지만 민주당에서도 대거 이탈표가 나왔다. 이상호·정필모 의원은 아예 반대표를 던졌고, 신동근·노용래 최고위원과 박용진·이탄희 의원 등 23명은 기권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부위원회에서부터 ‘원안 뒤집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안전조정위원

회 의결정족수를 위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정 위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후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올려 가결시켜 민주당이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사과까지 했다.

법안 처리 과정의 잡음과 정부안(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당내에서도 골장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무위 소속인 박용진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원안을 강력 지지했기에 미안의 본회의 통과는 아쉬움 가득한 또 다른 속제를 낳았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정무위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된 건지 이

해가 안 되는데 좀 아쉽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초 정부가 가져온 법안도 ‘전속고발권만 폐지한다’고 돼 있어서 애매했기 때문에 차제에 경성(담합)과 여성(담합) 구분 없이 전체를 폐지하는 문제를 다음번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김태년 “공수처는 필연적 개혁 野, 군사·독재정권 후에 자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과 관련해 “또 하나의 장애물을 넘는다”며 “공수처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출발하는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고,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했다.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

라 공수처법은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외에도 국가정보원법과 남북관계기발전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데 대해 “국정원법은 악용돼왔던 정보수집을 폐지하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법안이고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전단지 발송을 막는 평화의 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임을 자처하려는 건지 묻지 않을 없다”고 비난했다.

뉴스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